

기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화

박기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머리말

한국의 언론인구는 86년 2월말 현재 2만 1백 75명으로 밝혀졌다.¹⁾ 이 중에서 편집국을 포함한 제작직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7천 5백 87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같이 밝혀진 7천 5백 87명이라는 소수의 핵심 언론인들이 4천만명이 넘는 한국의 전체인구에 여러 모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이들 언론인들의 자질과 품격이 형편없었다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매체이용자들에게도 나쁠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자신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가령 사실을 왜곡보도 한다면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며 오보를 한다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을 포함한 모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위 윤리강령을 채택,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강령을 해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언론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자질향상과 전문화는 항상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나 중재위원회와 같은 자율적 통제기구들이 필요하며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법에 호소하는 것과 같은 타율적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언론기관들이 해마다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한국언론연구원이 또한 언론인들에게 국내외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언론인들의 윤리강령 위반사례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II. 한국 언론인들의 자질

언론인들의 자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윤리실천요강의 위반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위반사례를 가려내는 신문윤리위원회나 방송윤리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안진기는 1961년 설립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1964년부터 74년까지 10년간 내린 심의결정사항을 윤리실천요강의 장과 조별로 분석했다.²⁾ 이 분석에 따르면 「보도와 논평」의 장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보도를 한 경우」가 37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타인의 명예와 자유」의 장에서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봉심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 경우」로 353건이며 셋째가 역시 「보도와 논평」의 장에서 「사실의 전모와 의미를 포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부분만 보도한 경우」로 348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반사례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내린 규제는 주의환기 786건, 비공개경고 649건, 공개경고 421건, 정정요구 286건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10년 동안에 다룬 위반 사례수는 총 2천 1백 98건이었다. 이 같은 위반사례로 미루어 볼 때 기자들의 자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곡보도, 오보, 개인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이다. 왜곡보도와 오보는 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사작성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는 투철한 전문직업인의 의식과 관계가 있다. 글만 잘 쓸 수 있다고 해서 기자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Merrill 과 함께 「미디어, 메시지 그리고 인간」이란 책을 쓴 Lowenstein은 기자가 되고 싶은 저널리즘전공 학생들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다.³⁾ 즉 언론계에 투신하고 싶은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가장 잘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 자신에게 글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을 살려 밥벌이 직장을 구해보자는 뜻으로 저널리즘을 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안진기의 윤리강령 위반사례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년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후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연도별 신문·방송윤리규제건수*

매체/연도	76	77	78	79	80	81	82	83	84
신문	142	100	125	49	45	133	225	121	99
방송	489	321	238	392	416	370	1,043	581	436

*이 표는 1977년도 한국신문년감과 1978~85년도 한국신문방송년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규제기관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방송윤리위원회다.

<표 1>의 윤리규제경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6 년도에는 범죄사건보도와 관련된 타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외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한 신문연재소설, 보도기준 위반사례 순서도 많았다. 1977 년도에는 오보와 인권침해 등 신문윤리문제가 상당히 있었지만 오락기사로 인한 문제가 더 컸다. 즉 신문사간의 치열한 경쟁탓인지 신문소설과 같은 오락기사에서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흐른 선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심의규제내용별로 살펴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광고규정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연예오락이었다. 방송윤리분야에서는 일부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속어, 비어, 은어 등을 남용하여 의도적으로 유행어를 조장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1978 년도에는 신문의 경우 보도기사에서 다소 규제사례가 발생했지만 예년보다 향상된 흔적을 보였다. 그러나 신문소설 등 오락성 기사에서는 여전히 지나친 흥미본위의 제작 태도를 보였다. 방송분야에서도 규제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내용별로는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예오락방송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이 광고위반, 보도, 사회교양 순서로 많았다. 유신체제 말기인 1979 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오보사례가 비교적 적었으며 인권침해사례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같은 추세는 사건취재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경찰기자실의 폐지와 계엄당국의 검열 등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1979 년도에 발생한 10·26 사건을 전후로 언론자유의 변화에 따라 일부 신문의 제작방향에도 변화가 발생한 점이다. 즉, 종래의 흥미본위에서 보도중심으로 옮겨진 것이다. 언론자유의 폭이 작을 때는 신문이 오락기능을 중시하는 듯한 인상을 보인 것이 바로 1979 년도였다. 한편 방송사의 윤리규정 위반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반시청자의방송내용에 대한 진정사항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 주었다.

윤리규정위반부문별로는 광고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연예오락, 보도, 사회교양 등의 순서였다. 1980 년도에는 신문의 오보와 인권 및 공익침해사례가 감소되었다. 1979 년 10·26 사태 이래 신문은 계엄령하에서 엄격한 검열을 거쳐 보도된 만큼 오보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관계기사는 비교적 검열이 완화되어 숫자상의 오보가 있었다. 또한 오락기사는 여전히 신문윤리에 저촉되어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했다. 특히 신문소설들은 모두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구체적이며 외설적으로 묘사하여 일가족이 함께 읽기가 어려울 만큼 저속했다. 한편 방송은 규제건수가 현저히 감소된 경향을 보였으나 아직도 예년의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었다. 부문별로는 광고위반사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예오락, 보도, 사회교양의 순서로 많았다. 1981 년도에는 인권침해문제가 새삼스럽게 강조되었다. 신문의 통폐합과 81 년 12 월말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한국언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신문은 격변하는 정치·경제면의 보도에 극도의 자제와 신중을 기해야 했다. 신문은 지면이 12 면으로 증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면은 다양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사회·문화면은 비교적 다양성을 보였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경영정책상 독자를 의식한 나머지 사건보도와 기획취재에 열중했으며, 사건보도의 과잉으로 때로는 선정주의로 흘렀다. 또한 이같은 사건보도가 간혹 인권침해사례를 발생시켰으며, 일부 신문의 오락기사는 여전히 사회윤리를 저해시켰다. 방송은 규제부문별로 살펴보면 연예오락이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사회교양·보도·광고의

순서였다. 방송은 품격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규제와 시정권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사한 위반사례를 반복적으로 지적당했다. 1982년에는 전년도보다 위반사례가 증가했다. 강력사건과 사고 등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각 신문사의 보도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보도사건의 윤리위반사례가 많이 증가했다. 이는 또한 전년도가 언론통폐합 직후였기 때문에 보도활동이 다소 침체되었으나, 1982년부터 다시 활발해지면서 위반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82년도에는 신문소설의 윤리위반사례가 전년도보다 배나 증가하여 신문소설의 에로티시즘 문제가 재론되었다. 윤리위원회는 전국신문·통신사 문화부장과 함께 「신문소설과 사회윤리」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토론했다. 또한 사회부장과는 「사건보도와 인권침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들을 거론했다. 방송분야에서는 예년처럼 연예오락의 위반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교양, 광고, 보도 순으로 많았다. 방송사들은 언론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1981년 3월 30일 발족한 방송심의위원회가 구 방송윤리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떠맡아 규제하기 시작했다. 1983년도에는 인권침해사례가 크게 감소되었다. 또한 신문소설은 에로티시즘을 탈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소설내용이 크게 달라져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 방송도 윤리위반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부문별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예오락이 가장 많고 다음이 광고, 사회교양, 보도의 순서로 많았다. 1984년도에 들어와서는 전년도보다 인권침해사례가 약간 증가한 반면 신문소설은 건실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설의 체재도 종래의 흥미본위의 장편에서 중편 또는 단편으로 옮겨지고 그 내용도 예술성을 보였다. 한편 방송은 공영화 이후 윤리심의결정사항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문별로는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예오락부문의 위반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교양, 보도, 광고부문 순서였다. 1981년 3월 31일 발족한 언론중재위원회는 85년말까지 278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접수했다.⁴⁾ 연도별로 살펴보면 81년에 44건, 82년에 50건, 83년에 71건, 84년에 54건, 85년에 59건이 접수되어, 대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81~85년 사이에 발생한 언론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20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신용훼손으로 63건에 달하고 있다.

III. 한국 언론인의 전문성

전문직이란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사회학자들은 전문직을 규정짓는 2개의 특성을 윤리강령과 시행규정이라 보는 사람도 있다. 매스컴 학자들인 Rivers와 Schramm은 매스컴의 변화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완만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언론인 자신의 변화를 초래해야 하며 이러한 오랜 과정이 바로 전문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⁵⁾ 전문직이나 전문화를 설명함에 있어 직업의 구조 자체 뿐만 아니라 직업인들 자신이 직업에 대해 지니는 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Gross가 내세운 전문직업인의 태도적 특성은 첫째 직업에 대한 고도의 참여의식, 둘째 경제적 보상보다는 내면적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에 대한 의무감, 셋째 공식적·비공식적 전문인협회를 통해 다진 동료전문인에 대한

친밀감 내지 유대의식이다.⁶⁾ 한편 Wilensky 는 전문직의 구조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즉 첫째 상근직업의 성립, 둘째 교육기관의 설립, 셋째 전문인협회의 창설, 넷째 윤리강령의 제정이다.⁷⁾ 한국의 언론직은 Wilensky 의 구조적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전문화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표면상 전문화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태도적 특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태도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 이외에 전문화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다. 이것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획득하고 연마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혹은 재교육은 언론인의 자질향상에 있어서나 전문화과정에 있어서 모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언론인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최근의 조사를 살펴본다면 Gross 가 내세운 태도적 특성과 연관시켜 전문화의 정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조사 가운데는 윤임술의 「신문과 언론인 의식」(1981), 한국언론연구원의 「제 2 차 언론인직업환경조사」(1983) 등이 있다. 우선 윤임술의 조사에서 한국언론인들의 전문적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한국신문의 보도경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가 7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타」의 74.9%, 「센세이셔널리즘이 심하다」의 27.3% 순이다.

여기에서 「기타」란 관급기사보도에만 치중한다거나 핵심적인 문제는 교묘히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기자직에 대한 직업관」에 대해서는 「미래에 별로 기대를 가질 수 없다」가 3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그저 그렇다」(20.4%),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19.9%), 「훌륭한 직업이다. 평생을 바치겠다」(19.2%) 등의 순서이다. 「기자직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해서」가 2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가장 개성이 강한 직업이므로」, 「적성이라고 생각해서」 등의 순서이다. 한편 「기자생활에서 가장 불만을 느끼는 점」은 「장래가 보장 안된다」가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타기업에 비해 보수가 적다」(30.7%), 「기타」(24.8%) 등의 순서이다. 여기에서 「기타」란 놀랍게도 주로 기사를 잘 쓸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같은 질문들에 대한 응답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전문가다운 태도적 특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대기자제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대기자제를 꼭 두어야 한다」가 6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현실여건이 들 수 없게 되어 있다」로 22.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이 83년에 612 명의 현역기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론사 입사 5년 이상인 중급과정 연수교육 이수자들 가운데 52.6%는 기자직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입사 5년 이하인 초급은 40%에 지나지 않았다. 개도, 해설, 고발, 공정성, 생활정보 제공 등 여러가지의 언론기능에 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 대답은 평균 7.0%인 반면 충실하지 못하다는 대답은 40.1%나 되었다. 불만의 내용에 대해서는 초급의 경우 봉급이 적다(21%), 업무량 과다(11%), 사회불신(10%)순인 반면 중급은 공부·휴식시간 부족(34.2%), 사회불신(11.7%) 순이었다. 인권침해문제에 관한 초급과정의 반응에 있어서는 「이유없는 부당한 비판이다」가 5%에 지나지 않는 반면 「언론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가 51%, 「취재에서의 과열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가 44%였다. 선정적 보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가

54.6%, 「너무 심하다」가 24.8%, 「그저 그렇다」가 18.3%, 「조금도 그런 경향이 없다」가 2.3%였다. 윤리·심의규정 이행도에 대한 초급과정의 반응을 살펴보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본다」는 10.3%,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73.8%, 「전혀 지켜지지 않고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가 3.6%, 「생각은 하나 지켜지지 않는다」가 8.7%, 「그저 그렇다」가 3.6%였다. 이재원 교수는 한국언론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 가운데 하나로 권위주의적인 보도경향을 들고 있다.⁸⁾ 똑같은 사실 혹은 상식적인 말을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지명도 높은 학자의 이름이나 학설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권위주의적 보도경향을 한국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학생 4명⁹⁾으로 하여금 C 일보와 D 일보가 1985 년도에 발행한 신문들을 내용분석토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C 일보가 1985 년도에 신문지면에 게재한 교수들의 글은 총 352 편(동일인 반복 게재 포함)이었으며 D 일보는 이보다 약간 적은 321 편(동일인 반복 게재 포함)이었다. C 일보의 경우 352 명의 교수들을 소속대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100 명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화여대 63 명, 성균관대 46 명, 중앙대 19 명, 고대 16 명의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모두 10 명미만으로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26 개의 다른 대학교에 걸쳐 크게 분산되어 있다. D 일보의 321 명 교수들을 소속대학별로 살펴보면 고대가 93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대의 77 명, 연대의 30 명, 경희대의 26 명, 이대의 25 명, 한양대의 13 명 순이었다. 나머지는 역시 10 명 미만으로서 315 개 대학교에 걸쳐 크게 분산되어 있다. C 일보와 D 일보가 모두 대학교수들에게 전문성을 떠맡기는 권위주의적 보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대학교들을 편파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IV. 한국의 언론인 재교육

언론인의 재교육은 자질향상을 위해서나 전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언론인재교육은 1953년 공보처의 협조를 고 광복산 교수의 「서울신문학원」에서 개최한 「신문기자 아카데미 강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재교육강좌는 공보처의 재정지원중단으로 몇차례의 강좌 끝에 끊어지고 말았다. 언론인재교육을 대학교, 언론기관 그리고 한국언론연구원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재교육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언론인 재교육은 1963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가 시작했다. 당시 1년 연구과정으로 현역 일선기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1968년 서울대에 신문대학원이 따로 개원되는 바람에 서울대 신문연구소는 1967년 문을 닫았다. 서울대 신문대학원은 매스컴전공 연구자들을 위한 2년제 석사과정과 함께 현역 언론인들의 재교육을 위한 1년제 연구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개설되었다. 이 두 연구과정은 언론인재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75년 서울대학교에 정규교육만을 담당하는 신문학과가 개설되어 신문대학원이 폐교되었다. 서울대 신문대학원이 폐교된 후 1981년 3월 중앙대학교가 전문대학원을 개설, 언론인재교육을 떠맡았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은 야간전문대학원으로서 5학기제 석사과정과 1년제 연구과정 등 두 과정을 개설했다.

2. 언론기관의 재교육

언론기관이 주관한 최초의 언론인 재교육은 1966년 국제신문인협회(IPI)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실시했던 부정기적 세미나였다. 전국신문사의 간부와 일선기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 세미나는 72년에 중단되었다. 한국언론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신문연구소는 1977년부터 1주간씩 기자들에게 연수특강을 실시했으나 이것도 역시 도중에 중단되었다. 1964년 창립한 한국기자협회는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첫단계로 지방기자들에게 2~4일간의 단기 재훈련을 실시했고 68년부터 72년까지는 각 부서별 그리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71년부터 73년까지는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과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중견언론인들을 단기적으로 재교육했다. 이밖에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65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나, 지속성이 없고 단기적이며 또 체계화된 것이 아니므로 재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세미나다.

3. 한국언론연구원의 재교육

한국언론연구원은 언론통폐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언론인 재교육을 제도화시켰다. 언론연구원의 재교육과정은 ①입사 6개월 이전의 수습기자를 위한 기초과정, ②5년 미만의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급과정, ③5년 이상 차장대우 이하의 기자를 포함하는 중급과정, ④차장과 부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상급과정, 그리고 ⑤부국장에서 논설위원 및 임원진까지

포함하는 특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연구원의 재교육과정은 언론통폐합 이전에 각종 언론기구들이 주관해 온 세미나와 연수회 등을 한군데에 모아 제도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연구원을 통한 국내·외 연수교육 이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국내·외 연수자 현황(81. 8~85. 12)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계
국내연수	627	1,058	1,146	845	1,390	5,066
해외연수	24	50	30	30	29	163

V. 언론윤리 규제사례와 언론인 재교육 사이의 상관관계

한국언론인들의 자질과 재교육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미 밝혔던 통계수치들(표 1 과 2 를 참조할 것)을 이용하여 언론규제와 재교육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교육이란 언론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언론인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윤리강령 규제사례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통계수치들의 성격상 Spearman 순위차상관관계계수 산출공식을 이용했다. <표 3>은 신문윤리규제와 재교육 사이에 낮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적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은 반대로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상관관계계수를 산출하기에는 재교육기간이 겨우 5년 밖에 안되어 짧지만 그런대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는 <표 3>과는 반대로 방송윤리규제와 재교육 사이에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관계는 재교육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신문기자의 재교육이 효과면에서 정반대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는 신문과 방송을 합한 언론의 규제와 재교육 사이에 극히 낮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교육이 언론규제에 미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표 3>, <표 4>, <표 5>에서 밝힌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표에 대한 통계적 해석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표 3> 신문규제와 재교육 사이의 상관관계

신문윤리규제건수	재교육	국내	해외	계
80년	45	1,271	-	845
81년	133	499	18	517
82년	225	782	28	810
83년	121	769	15	764
84년	99	598	18	616

P= -0.3

<표 4> 방송규제와 재교육 사이의 상관관계

방송윤리규제건수	재교육	국내	해외	계
80년	416	476	-	476
81년	370	128	6	134
82년	1,043	276	22	298
83년	581	397	15	412
84년	436	247	12	259

P= -0.3

<표 5> 신문·방송규제와 재교육 사이의 상관관계

언론(신문·방송)	규제건수	재교육
80 년	461	1,747
81 년	503	651
82 년	1,268	1,108
83 년	702	1,176
84 년	535	875

P= -0.1

VI. 맺음말

한국언론인들의 자질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향상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윤리강령 규제사례들의 증가와 감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언론규제경향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국언론인들의 자질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론규제경향은 특별히 어떤 패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즉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언론중재 신청사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대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언론규제경향에서 신문과 방송의 양분하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오락과 연예부문에서 모두 한결같이 선정적이고 외설적이며 저속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규제받았던 동일한 위반사항들을 근절하지 못하고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반복성에 있다. 머리가 나쁜 학생도 똑같은 실수를 여러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언론인들의 자질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언론인들의 전문성에는 의식구조 조사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있다. 즉 전문인다운

태도적 특성이나 동기부여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언론인들의 재교육은 다행히도 그동안에 제도화되었다. 이같은 재교육은 언론 내부인사들 뿐만 아니라 언론 외부인사들도 모두 함께 언론인들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재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가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재교육방침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재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론윤리 규제사례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윤리규제사례와 재교육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간단한 시험적 조사를 시도해보았다. 언론인들에 대한 재교육은 현재로서는 지극히 적은 정도일망정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란 장기적 투자이므로 좀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주>

- 1) 한국의 「언론인구」, 신문과 방송, 1986년 3월호, No.183, p.12.
- 2) 안진기, "한국신문의 윤리문제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논문, 1974, p.70.
- 3) John C. Merrill and Ralph L. Lowenstein, Media, Messages and Men : New Perspectives in Communication(New York : David McKey Company Inc., 1971), p.119.
- 4) 언론중재사례분석, 언론중재, 1986년 봄호, pp.14~15, p.23.
- 5) William L. Rivers and Wilbur Schramm, Responsibility in Mass Communication(New York : Harper & Row, 1969), p.240.
- 6) 박유봉·서정우·차배근·한태열 공저, 신문학이론(박영사, 1974), p.119에서 재인용.
- 7) 상계서, p120에서 재인용.

8) 이재원, "언론의 현실관찰과 한국언론의 보도경향 : 신문과 방송, 1984년 6월호, p.45

9) 김덕모, 임병선, 임현규, 조동진

- 한국외국어대 독어과, 미국 오하이오대(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저술 : 「거짓말 형태」 외 다수

- 현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과 교수